호남 광역의회 의장단協 오늘 발족

새만금 개발·광주 무안공항 상생 이끈다

초대회장에 윤봉근 광주시의장…연 4회 정기회의

광주와 전남, 전북 광역의회 의장단들이 호남지역 지역현안 공동 대처와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의회가 참여하는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공식 출범한다.

협의회에는 3개 지역 광역의회 의장단들이 참여하며, 협의회 초대 회장은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맡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부회장에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정책위원회의장에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 간사에 이은방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으로 임원진을 구성했다.

협의회는 연 4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열 계획이며, 현재 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거구 및 광역행정구역 개편 ▲새만금 개발 계획 ▲광주공항 및 무안공항 활성화 ▲광주전투비행장 이설 ▲혁신도시 건설 ▲영산강사업 ▲국립공원 지리산권 케이블카 설치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복선화 조기추진 ▲빛그린 공동국가산업단지 조성 ▲광산업 전문 R&D 특구 조성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지역 공동 현안 문제 협의와 의견 수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분석 협의, 각종 정보 및 자료 교환 등을 통해 호남권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광주공항 및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와 전남도와 전북도가 중복사업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J프로젝트와 새만금 개발에 대해 어떤 합리적인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3곳의 광역단체가 추진하거나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에 대해 또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자칫 지역민의 반발도 우려된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공항 및 무안공항 갈등 등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광역의회 의장단이 협의조정을 통해 시·도민이 이익이 되는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광역의회도 지역현안에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공동발전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북구 '건강·복지타운' 착공

지난 19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근린공원에서 열린 '건강·복지타운 기공식'에서 송광운 북구청장과 강기정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오는 2012년 4월 준공되는 건강타운에는 25m 성인 풀 6개 레인과 15m 아동 풀 5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에어로빅센터, 헬스장 등이 조성된다. 〈북구청 제공〉

北 "원심분리기 2000개 가동중" 공개

'우라늄 카드' 노골적 과시 파문…한반도 핵 위기감 고조

보즈워스, 긴급 동북아 순방

북한이 '우라늄 카드'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핵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기는 핵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고농축우라늄(HEU) 시설 기반으로 의심받아왔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등 6자회담 관련 국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최근 북한을 방문해 우라늄농축시설을 둘러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 수백개의 원심분리기가 초현대식 제어실에 설치된 것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은 헤커 교수에게 원심분리기 2000개가 이미 설치돼 가동중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제조하기 위한 핵심장비인 원심분리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플루토늄과 우라늄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핵무기 개발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지난 18일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끝내 방해하고 조선에 압박을 가하는 길을 택한다면 '두 통로'의 다른 한쪽(우라늄 기반)인 핵억제력강화노선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조선을 떠밀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분리기 2000개 정도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우라늄 핵무기의 임계질량(약 20kg)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장비 수준으로 제시해왔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새로운 갱도를 건설하는 등 제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된 상황과 맞물려 핵위기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의 도발에 따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날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위 본부장도 22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협의를 갖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과 조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외교소식통은 21일 "북한의 움직임이 단순히 엄포를 넘어 '실체적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盧 전대통령 봉하마을 사저 일반 공개키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 후 줄곧 머물렀던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가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현재 미망인인 권양숙 여사가 살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하1층, 지상 1층, 건축 연면적 1천277㎡(387평) 규모로, 'ㄷ'자 구조로 돼있다.

노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이날 "노무현재단이 노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진행 중이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기념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 소유를 노무현재단으로 귀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추모기념사업을 총괄하는 노무현재단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기념사업 계획안을 지난 10월 확정했다. 노무현재단은 기념사업을 위해 2010~2012년 3년간 180억원의 국고지원을 신청했다.

사업계획에는 현재 봉하마을에 위치한 임시추모관을 '봉하 대통령 기념관'으로 바꾸고 사저를 공개하는 것을 비롯해 교육문화공간인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서울 노무현 센터' 건립, 사료편찬사업, 묘역생태공원, 교육사업,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외교부 "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

입법논란 예고

외교통상부가 2012년부터 실시될 재외국민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도입, 공관 투표와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입법논의가 주목된다.

최근 모의 재외국민선거에서 드러난 저조한 투표율을 높여 재외국민 선거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우편투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게 외교부의 논리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1일 "최근 모의선거에서 드러난 투표율이 너무 저조해 이대로는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고 본다"며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우편투표를 도입하는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입법논의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외교부는 우편투표가 인터넷투표와 더불어 선거에 편리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대안으로 보고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우편투표는 제도상의 편리함 때문에 미국, 일본 등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0개 회원국 가운데 독일과 스위스 등 11개국은 우편투표만 허용하고 있다는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우편투표는 선거제도의 생명인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가족 등 타인이 유권자를 대신하는 대리투표의 위험성이 공관에서 직접 투표하는 경우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런 점이다.

/연합뉴스

KBS이사회 "수신료 3500원으로"

여야 이사 만장일치 의결…광고 현행유지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19일 30년째 월 2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를 1000원 오른 35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 비중은 현행 수준(현재 40% 이하)으로 유지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그간 야당 측 이사들이 주장해온 '수신료 3500원으로 인상+광고 비중 현행유지안'을 여당 측 이사들이 결국 수용하면서 수신료 인상안을 합의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여당 측 7명, 야당 측 4명 등 11명 이사 전원은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된 지 5개월 만인 이날 표결없이 합의로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KBS 이사회는 이날 야당 측 안을 전격 수용한 것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를 현행유지하면서 인상폭을 대폭 낮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 수신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 개의 큰 산을 더 넘어야 한다. /연합뉴스

"멸종위기 호랑이 구하자" 13개국 정상회의

단일 동물 운명 최초 논의

24일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멸종 위기에 처한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 13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21~24일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자칭 동물 애호가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등 호랑이가 서식하는 국가 정상과 관계자 등이 참가해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단일 동물의 운명을 논하는 정상회의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는 다음 호랑이해인 2022년까지 야생 호랑이 개체 수를 현재의 2배인 6000마리 이상으로 늘리는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 따르면 100년 전에는 10만 마리에 달했던 호랑이가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현재 3200마리로 줄었다.

회의에 참가한 각국 지도자들은 "이미 3개의 아종(亞種)이 멸종했고 다른 6개 아종도 모두 위험하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 보호대책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 중 최근 호랑이 개체 수가 늘어난 곳은 러시아가 유일하다. 1960년대 80~100마리에서 현재 약 500마리로 증가했다. 또 다른 참가국인 인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야생 호랑이 1411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의에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태국, 베트남 등이 참가한다. /연합뉴스